

“세계가 주목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법무부, 외신 기자 초청 행사 진행

- 6월 본격 시행된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연
- 외신 기자단 첨단 기술 접목된 케이(K)-전자감독 관제 과정 직접 체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9. 8.(화)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에 외신 기자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전자감독 제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날 외신 기자단은 전자발찌 시착과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감독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생생히 취재하였다.

현장에서 한 외신 특파원은 “가해자의 동선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불안감 없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의 첨단 기술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외신 기자들도 2024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 조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보복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에 주목하면서 많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 전자감독 시스템이 ‘가해자 통제’를 넘어 ‘직접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책임자	과 장 강신원 (02-2110-3793)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02-2110-3794)

